

# “전통시장 화재보험 의무화 추진… 무등록점포 대책 마련”

## 중기부 산하기관 국감

“시장상인 화재공제 가입 13% 인식개선 등 가입을 제고해야”  
 “미판매 온누리상품권 누적 2조 내년 4조 발행… 계획 수정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가 19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감에선 이들 기관이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정책·예산 집행의 효율화’에 대한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우 ▲전통시장내 무등록점포 해결 방안 ▲낮은 화재공제 가입률 제고 대책 ▲온누리상품권 발행 및 관리 문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운영 미숙, 수출바우처 사업 허점 등이 대표적이다.

창사이후 올해 첫 흑자 원년을 예고하고 있는 공영쇼핑에 대해서 최창희 대표의 회사 운영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날 국감에서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에게 “전통시장의 무등록 점포는 단속 대상이나, 단속 대상이 아니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이에 대해 조봉환 이사장은 “지원이 더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별 전통시장내 사업자등록이 없는 노점 비율은 전북이 45.2%로 가장 많고, 울산(35.3%), 충북(31%), 제주(30%) 등도 3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전통시장내 17%가 무등록 점포 상태다. 언제까지 이 상태로 놔



최창희 공영쇼핑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특혜채용 의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학영 국회 산자중기위 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르고 있다. /뉴스1

둘 계획이나, 무등록 점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이사장은 “(주무부처인)중기부와 논의하고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가뜩이나 전통시장이 화재에 취약한 상황에서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의 낮은 가입률도 문제로 지적됐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상인들이 일정 금액의 공제료를 납부하면 이를 기금으로 조성하고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 화재 발생시 신속한 복구와 상인들의 생계를 돕는 상품이다.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하루 벌어먹고 사는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비용부담이 커 (화재공제)가입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면서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을 더 해서라도 가입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8년 기준으로 전국 전통시장내 18만4412개 점포 가운데 화재공제에 가입한 곳은 2만3927곳으로 가입률은 고작 13% 수준이다. 정부와 소진공은 올해의 경우 3만개 이상까지 가입점포수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체 중에선 여전히 미미한 숫자다.

조 이사장은 “화재공제 상품이 지자체 지원 등으로 인해 민간 보험사의 화재보험보다 (비용이)30% 가량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낮은 만큼 인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입률을 제고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소진공이 맡고 있는 온누리상품권 관리 문제도 나왔다.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금융기관에서 폐기한 온누리상품권 가운데 일부가 재유통됐다는 의심이 든다”면서 “용역업체가 폐기했다는 179장과 금융기관이 폐기한 4장 등 총 183장의 폐기(온누리)상품권이 시중에 다시 유통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소진공은 이에 대해 고발조치했지만 경찰은 증거가 없어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권명호 의원(국민의힘)은 “지금까지 판매되지 않은 온누리상품권이 누적으로 2조원 어치에 육박한다”며 “내년에 도 4조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예측을 잘

못해 세금만 낭비하고 있다. 정책이 보완·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중진공의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가 청년들의 ‘눈물채움공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진공은 6개월 이상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중기부 소관), 취업 6개월 이내 근로자를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 소관), 재직근로자가 가입대상인 ‘내일채움공제’(중기부 소관)를 각각 수행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폐업 등 기업의 귀책사유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해지당한 청년이 또 다른 회사에 취업했다라도 재가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고용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엔 보조금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전액 반납한 후 재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담당 부처는 다르지만 유사한 상품을 놓고 온도차가 서로 다른 모습이다.

김 의원은 “가입 청년들에게 귀책사유가 없는데 재산형성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만큼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도 고용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수준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영쇼핑은 잦은 인사이동과 조직개편, 부정채용 의혹 문제 등이 이날 국감에서 거론됐다.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은 “공영쇼핑의 인사이동이 너무 잦았다. 상임감사에 대한 갑질 의혹을 제기한 청와대 국민청원도 있었다. 공영쇼핑 노조조합원이 작성한 직장생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만족도)가 엉망진창이다. 그런데 회사는 이에 대해 ‘팩트체크’라며 반박을 했다. 내가 보기엔 (반박한) 이게 더 잘못된 팩트 같다”고 꼬집었다.

최창희 대표는 “취임할 당시 그동안의 누적된 문제로 인해 전 직원의 10% 정도가 징계를 받았다. 취임하고 나서 인사를 하면 징계를 먹고, 또 징계가 반복돼보니 인사가 잦았다, 또 유통시장이 급변하는 가운데 필요한 태스크포스(TF) 조직 과정에서 인사를 추가로 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설문조사를 놓고 (회사가 다시)반박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상처를 받았다면 제 배려가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 대표는 “상임감사 등에 대해서 중기부에서 별도로 감사를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울러 (앞서 제기된)나와 관련한 내용까지 포함해 중기부에 추가로 감사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류호정 의원(정의당)은 2018년 당시 공영쇼핑이 마케팅 본부장을 채용하면서 ▲관련 분야 경력이 20년인자 ▲10월 둘째주로 예정된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한자 등을 지원 자격으로 내세웠지만, 이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을 채용했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승호·백지연 기자 bada@metroseoul.co.kr

## 유진홈센터-철물 편집숍, 맞손… ‘팝업스토어’ 문열어

‘에이스하드웨어×정음철물’ 운영 제품 체험기회, 고객과 접점 확대 공구·페인트 등 PB상품 큐레이션

유진그룹 계열인 유진홈센터가 철물 편집숍과 콜라베이션을 펼친다.

인테리어·건축자재 전문브랜드 에이스하드웨어를 운영하고 있는 유진홈센터는 ‘에이스하드웨어×정음철물’에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오는 11월8일까지 서울 서대문 정음철물에서 진행되는 이번 팝업스토어는 에이스 하드웨어 제품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고객들과의 접점을 확장해 나가기 위해 주식회사 정음과 함께 기획하게 됐다.

에이스 하드웨어 팝업전시존이 마련된 정음철물은 1993년부터 연희동의 사랑방이었던 정음전자를 새롭게 재해석해 만든 동네 철물 편집샵이다.

건축 및 인테리어와 관련된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와 지역의 목수, 장인을 소개하며 유튜브 채널 ‘철물TV’를 통해 전기·공구 사용법을 알려



유진그룹 계열인 에이스하드웨어와 정음철물의 협업 팝업스토어.

준다.

큐레이션샵에서는 양질의 하드웨어와 전자제품을 전시·판매한다.

이번 ‘에이스하드웨어×정음철물’ 팝업스토어는 에이스 하드웨어의 대표 취급품목인 공구, 페인트, 인테리어·건축자재 중 인기 PB상품만 큐레이션해 선보이며, 유진기업 전자제품도 소개한다.

또한 실크스크린인쇄 기법으로 제작한 맨투맨 티셔츠, 마스크 스트랩, 목장

갑 등 에이스 하드웨어의 오랜 역사와 전통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굿즈를 단독으로 만나볼 수 있다.

유진홈센터는 팝업스토어 오픈을 기념해 다양한 혜택을 담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1만원 이상 구매 시 1인1회 한정 ‘마스크 스트랩’을 증정한다. 팝업스토어 인종상을 SNS에 올리면 ‘목장갑’을 제공하며 추첨을 통해 30명에게 ‘ACE폴딩박스 25L’를 선물한다.

/김승호 기자

## 교수·연구원 창업부담 던다

기보 ‘테크밸리 보증제도’ 확대시행 기획창업 기업 운영, 사업주력 도와

기술보증기금이 교수와 연구원들의 창업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나섰다.

기보는 교수·연구원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테크밸리 보증의 대상기업과 보증우대 내용을 확대하는 등 테크밸리 보증제도를 대폭 개편해 지난 16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학교가 전문경영인(CEO) 영입, 투자유치 등 설립을 주도하고, 기술을 보유한 교수 등이 기술책임자(CTO)로서 참여하는 ‘기획창업 기업’을 테크밸리 보증 대상기업으로 운영한다.

‘기획창업 기업’은 교수·연구원의 기업경영 등에 대한 부담을 덜고 기술개발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엔 교수·연구원이 반드시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의 지위에 있어야만 보증지원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CTO로 참여해도 테크밸리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우대지원 확대를

위해 ▲보증비율 상향(90→95%) ▲보증한도 사정방식 완화 등을 적용해 테크밸리 기업들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테크밸리 보증은 교수·연구원이 개발한 우수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2017년 1월 도입한 맞춤형 보증지원 프로그램으로, 창업교육 및 보증·투자·기술이전·인증 등 창업부터 성장까지 전 주기에 걸쳐 우수 기술인력의 성공 창업을 돕는 종합지원 플랫폼이다.

기보는 그동안 협약기관 확대, 지속적인 제도 개선 등의 노력을 통해 총 92개의 대학·연구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352개의 테크밸리 기업을 발굴해 6450억원의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우수기술기업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했다.

기보 김영춘 이사는 “그동안 대학교수는 창업 후 강의와 연구를 병행하면서 투자유치, 연구개발, 세무 등 회사 운영 전반을 책임져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획창업 기업도 테크밸리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어 교수·연구원이 연구개발과 사업화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